

K-SDGs 작업반 목표 및 지표 초안에 대한

NGO그룹 입장문서

최종

글 순서

1. 서문
 2. 경제분야
 3. 건강분야
 4. 교육분야
 5. 도시분야
 6. 환경분야
 7. 평화분야
 8. 거버넌스분야
 9. 국제개발협력분야
- ❖ 부록 : 초안팀 명단, NGO그룹 명단

1. 서문

<배경>

- 지난 2017년 5월, 새롭게 들어선 문재인 정부는 경제·사회·환경이 통합적인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현재 환경부 산하에 있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고 ‘2030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수립하는 것 등을 국정과제로 천명.
- 이에, 정부는 담당부처인 환경부를 중심으로 지난 2018년 4월 20일, 유엔의 17개 목표를 기본 틀로 하여 올해 내 한국형 SDGs 개발 및 수립을 목표로 한,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수립 계획을 발표(지속가능발전포털).
- 주목할 만한 것은 정부와 전문가 중심의 SDGs 목표와 이행계획 수립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의견수렴 구조로써 보다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참여 체계를 구축.

- 유엔의 다양한 주체그룹 참여 체계(MGoS: Major Group and other Stakeholders)를 준용한 정부의 K-SDGs MGoS 체계는 그동안 시민사회로 통칭되어 왔던 여성, 장애인, 시민사회단체(NGOs), 농민, 노동자, 기업, 학계 등 주요 사회 주체 그룹들을 세분화하여 공개모집하고, 정부가 작성한 K-SDGs 초안에 대해 그룹별로 입장문서를 상·하반기 2차례에 걸쳐 제출하면 반영하는 구조.
- 또한, 의견수렴 과정과 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위해 정부의 K-SDGs 초안과 그룹별 입장문서는 정부의 지속가능발전포털(<http://ncsd.go.kr>)을 통해 공개·저장.
- 한편, K-SDGs MGoS는 1년 동안 활동하며, 효과적인 그룹별 활동을 위한 조직·연락담당자를 그룹별로 자체 선출.
- MGoS 참여 체계가 기존의 참여체계와 다른 점은, 1) 개인이든 단체든 참여자 기준과 수에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2)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참여 과정과 각 그룹의 입장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정부 홈페이지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되고 공식적으로 기록·저장. 또한, 3) 여성, 아동·청소년, NGOs, 농민, 노동자, 기업, 학계, 지방정부, 장애인, 노인 등 주요 주체그룹들을 세분화하여 누구도 배제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포용성 기준을 제시.
- 더불어 MGoS 참여 과정을 통해 상호 이해와 통합적인 관점이 증진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효과.

<K-SDGs MGoS 운영 과정에 대한 입장>

- MGoS 참여 체계는 지난 2017년부터 ‘한국 시민사회 SDGs 네트워크(SDGs시민넷)¹’가 기존의 전문가 중심의 폐쇄적인 정부위원회와 단발적이고 수동적인 시민공청회 방식의 의견수렴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제시해 온 새로운 참여 플랫폼으로, 정부가 시민사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K-SDGs 수립 과정에 이를 도입해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에 대해 환영.
- 또한, 유엔 SDGs에서는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 체계로써 이러한 MGoS 참여 체계를 도입 할 것을 국가에 권고하고 있는데, 현재, 대부분의 국가들이 기존의 정부위원회와 시민공청회 방식의

¹ 한국시민사회SDGs네트워크(SDGs시민넷)은 2017년 4월 결성되었으며, 여성, 장애인, 청년, 사회적경제, 공정무역, 주거, 교육, 의료, 평화, 인권, 에너지, 환경, 거버넌스,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28개 시민사회단체 연대체들이 참여.

거버넌스를 벗어나고 있지 못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정부가 선도적으로 MGoS 체계를 수용해 시도하는 것에 대해 NGO그룹은 적극 지지.

- 이는 시민촛불혁명 이후 들어선 현 정권의 ‘국민 참여 강화’ 기조와 맥을 같이 할 뿐만 아니라, 더 크게는 그동안의 행정 중심 거버넌스 체계에서 시민 중심 참여 거버넌스 체계로 나아가는 마중물이 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국제사회의 풀뿌리 민주주의 흐름에 일조한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진일보.

- 그러나 정부가 새로운 참여체계를 시도하는 만큼 사전 준비가 보다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점은 많은 아쉬움으로 남으며, 자칫 형식적인 결과로 마무리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SDGs시민넷은 다음과 같이 우려.

- 첫째, <국가 SDGs 수립> 기간을 9개월로 상정한 것은 기본적으로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다’라는 SDGs 이행 대원칙을 담보하기 곤란.

- SDGs는 누군가가 세워놓은 목표를 다수의 대중이 따르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의 목표를 도출해 함께 실천하는 것에 의의.

- 그러나 충분한 시간 동안 적절한 홍보를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국가 SDGs 수립> 가치를 이해하여 실질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구조에서는 공동의 합의와 실천을 위한 <국가 SDGs>가 아닌, ‘보고서’ 제작을 위한 형식적 과정이 될 가능성이 농후.

- 둘째, 지나치게 짧은 <국가 SDGs 수립> 기간으로 인하여, 정부가 야심차게 도입한 K-SDGs MGoS 운영이 현재 파행적으로 진행.

- 정부는 K-SDGs MGoS 참여자를 지난 2018년 4월 30일~2018년 5월 8일까지 단 9일 동안 정부가 운영하는 ‘지속가능발전포털’을 통해서만 1차 공개모집. 아쉽게도 ‘지속가능발전포털’은 대중적으로 인지도가 상당히 낮은 정부 웹사이트로, 심지어 지속가능발전 관련 활동을 하는 시민사회단체나 기업 등 이해그룹들도 잘 모르거나 자주 방문하지 않는 사이트. 현재 추가 공개모집이 진행 중이나 적극적인 홍보가 부족해 추가 신청이 거의 없는 상황.

- 또한, 5월 11일 MGoS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한 오리엔테이션 및 그룹별 조직·연락담당자 선출을 위한 모임이 마련되었으나, <국가 SDGs 수립>에서의 MGoS 참여 체계의 위상과 절차, 기준, 각 그룹별 역할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한 상황에서 그룹별 상황 파악을 위한 토론 시간도 주어지지 않아, 그룹별 입장문서를 준비해야 하는 그룹별

조직·연락담당자들이 후속 활동을 하기 곤란.

- 무엇보다도 5월 11일 공개될 예정이었던 정부의 <국가 SDGs 세부목표 및 지표 초안>이 5월 17일부터 5월 31일까지 순차적으로 지연되어 공개되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목표별로 종합 정리된 최종 초안이 아니라, 최종 취합되지 못한 작업 페이지들이 지속적으로 수정되어 제공되어, 사실상 MGoS 그룹들이 5월 14일~5월 30일까지 15일 동안의 주어진 기간 내에 입장문서를 제대로 작성할 수 없는 상황. MGoS 그룹의 요청으로 그룹별 입장문서 제출이 6월 11일로 연장되기는 하였으나, 불충분하고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정부 초안의 내용과 사실상 10일에 불과한 입장문서 작성 기간으로 인해, MGoS 체계의 취지를 살리기 곤란.

- 정부에서는 6월 21일, MGoS 입장문서를 반영한 정부의 <국가 SDGs>를 발표하는 국민 대토론회를 예정하고 있으나, <국가 SDGs>가 최소한 참여한 관계자들에게서 만큼은 동의를 얻을 수 있어야 하는데, 상기와 같은 과정의 미흡함으로 인해 과연 그럴 수 있을는지 의문.

- 현재 MGoS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사회 관계자들은 MGoS 참여체계의 의미와 정부의 혁신적이고 야심찬 시도를 높이 평가하기 때문에 과정에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개선의 가능성을 생각하며 참여.

- 그러나 MGoS 체계 근본 취지가 계속 훼손되는 상황에 직면한다면, 우리들은 MGoS 참여를 다시 심각하게 재고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이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개선하고, 향후 <국가 SDGs> 이행 시 고려해 줄 것을 요청.

- 1) 제때에 충분하고 접근하기 용이한 형태의 정보 제공

- 2) MGoS 입장문서 작성을 위한 최소 4주 이상의 충분한 시간 제공

- 3) 2018년 이후, <국가 SDGs>의 수정·보완 가능 방안 마련

- 4) 2018년 이후, 국가 SDGs 이행 점검의 공식 참여 체계로써 MGoS 체계 구축 및 적절한 기준과 절차 마련

- 한편, 그룹별 회의 및 조직 등 K-SDGs MGoS 참여 체계가 체계적으로 운영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예산도 책정되지 않아, 제반 활동비용을 참여 단체 및 개인에게 부담하게 한 것은 다양한 주체그룹, 특히 사회취약그룹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불가능하게 하는 구조로써, 향후 자발적 공론의 장이자 참여 체계인 MGoS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예산 마련 필요.

<NGOs그룹 입장문서 작성 기준 및 과정>

- NGOs그룹은 다음과 같은 원칙을 기반으로 입장문서 작성.
 -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다(유엔 SDGs 이행 대원칙)
 - 인권 및 성평등 관점 견지(유엔 SDGs 이행 대원칙)
 - 경제·사회·환경의 균형적인 통합적 관점 견지(유엔 SDGs 이행 대원칙)
 - 참여멤버의 독립성 및 자발성 기반
 - 소통과정의 투명성
- 또한, 다음과 같은 일정과 체계로 입장문서 작성.
 - 2018.05.11. K-SDGs MGoS 1차 구성 및 그룹장 선출
 - ※ 그룹장 : 윤경호 (사)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 2018.05.17. 그룹참가자 명단 및 작업반 초안 일부 공개
 - 2018.05.17. NGO그룹 이메일 계정 및 클라우드 서버 설정(구글)(소통수단)
 - ※ 이메일 : ksdgs.ngomg@gmail.com
 - ※ 구글드라이브 : 자료공유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_Sc31Wkr7FjoUWEJHQOCPM54pTeSUJvq?usp=sharing
 - ※ NGO그룹 멤버 대상 참가자 현황 및 작업반 초안 공유(이메일)
 - ※ NGO그룹 입장문서 작성 계획(안) 공유(온라인 문서, 구글Doc)
 - 2018.05.23. 입장문서 초안작성팀 구성(부록 참조)
 - 2018.06.01. NGOs 그룹내 입장문서 초안 회람 및 의견수렴
 - 2018.06.11. NGOs그룹 입장문서 최종본 제출

<NGOs그룹 입장문서 구성내용>

- NGOs그룹의 입장문서는 2018.5.23일자 기준 정부의 17개 목표별 세부목표 및 지표(안)을 토대로 작성.
- NGOs그룹에 참여한 시민사회단체들의 전문 주제 분야인 경제, 건강, 교육, 도시, 환경, 평화, 거버넌스, 국제개발협력 분야를 중심으로, 정부(안)에 대한 ‘총평’과 세부목표 및 지표 ‘제안’으로 기본적인 내용을 구성.
- 많은 사람들의 용이한 접근성을 위하여, 각 분야별 분량을 2페이지 내외로 제한.

2. 경제 분야

1) 총평

- 우리사회는 국민총생산으로는 세계 13위의 위상을 가지고 있음. 산업구조에 있어서는 수출중심, 대기업과 다수의 하청 중소기업을 특징으로 하고 있으며, 서비스업 중심의 지식기반 산업으로의 이행이 요청되고 있음. 이러한 구조에서의 양적 성장은 더이상 국민총행복과 가계 수입을 증대하는 낙수효과를 가져오지 못하는 것이 분명하여 국가경제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음.
- 가계 측면에서는 일자리 부족과 구조적인 청년 실업문제가 심각함. 가계부채 증가와 실질수입 하락이 가계의 안정과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실질소득 증대와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서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주요한 과제임.
- 기업 측면에서는 일자리의 대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중소기업의 성장과 중소기업의 근로환경이 개선되지 않아, 노동시장에서의 미스매치가 계속되고 있다. 근본적으로 공정한 기업거래 관행을 확립하고, 기술개발과 혁신을 통해 성장하는 산업환경을 조성하여 중소기업이 기업하기 좋은 제도와 기업규범이 필요함.
-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경제성장, 생산적 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표는 매우 적절하다고 판단됨. 현재의 경제적 불평등의 문제가 글로벌 자본주의 시장경제 시스템의 한계에 대한 해결책을 찾도록 촉구하는 가운데,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이 선언되어야 함. 개도국의 미래 모습도 발전된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모습은 아닐 것임.

2) 제안 세부목표 및 지표

- 지표는 GDP에 기반한 일정 부문에 한정되어 있음. 경제성장과 생산성 부문을 넘어서서 고용의 질과 관련한 노동환경, 근로취약계층에 대한 근로환경, 금융서비스 접근성 등의 부문에서 지표 개발 필요
- 나아가 국가경제의 패러다임이 GDP에 근간한 것에서 GDP로 환산되지 않는 사회적가치 창출로 이동하고 있음. ‘사회적경제’ 즉, 시민경제 활동이 가져오는 사회적, 공공적, 공유적 경제 활동을 인식하게 되었음. 공유하는 경제자산의 증대와 관리 등의 지표가 경제의 ‘지속가능’ ‘포용’의 목표 아래 개발되어야 함.
- UN의 지표에도 시장가치로 평가되지 않는 경제적 가치 증대를 위한 평가지표가 추가되어야 함.

한국의 사회적경제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가치 평가지표가 충분히 개발되지 못한 상황임. 하지만, 경제관련 SDGs의 지속가능한 포용적 경제성장이라는 목표에서 사회적경제가 고려되지 않고는 성과를 입증지표를 찾기 어려울 것임.

- 이번 입장문 준비과정은 열려진 방식으로 진행되어 환영함. 그러나 시간이 절대 부족하여, 사회적경제 조직의 참여는 제한적이었음. 개선되리라 기대함.

3. 건강 분야

1) 총평(우리나라 목표 설정에 대한 종합의견 및 방향)

- 향후 우리사회의 미래를 특징짓는 두 가지 큰 변화는 급격한 고령화 추세와 사회양극화임.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나라 목표 설정에서 건강불평등의 감소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예방중심 건강관리 지원, 건강형평성 등을 언급한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음. 다만, 목표설정에 대한 고려사항에서 좀 더 구체적인 문제로 접근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어 다음의 의견을 제출하고자 함.
- 국민건강보험제도와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예방사업 및 필수의료정책 등에 의해 건강보장이 확대되고 있고, 기대수명은 증가됨에도 세계에서 유래가 없을 정도로 급속한 고령화, 건강위험요소 등의 사전관리 미비, 소득 불평등 심화에 따라 고령층, 저소득층 등 건강취약그룹 등으로 건강불평등은 심화되고, 만성질환의 유병률과 질병부담은 여전히 높고, 기대수명 증가에 비해 건강나이는 증가되지 않는 등 문제점을 안고 있음.
- 일차의료를 근간으로 한 의료체계의 정비, 커뮤니티케어를 통한 돌봄-의료 연계체계 구축이 필요.
 - 흡연, 음주, 신체활동, 식생활 등이 만성질환(비감염성 질환: Non-Communicable diseases)의 예방과 관리에 핵심적인 과제로 등장하고 있음.
 - 일차의료가 강화되어야 2차, 3차 병원의 역할 분담과 협력체계 구축이 가능함.
 - 커뮤니티케어에 있어서도 돌봄과 의료의 연계 구축 없이 복지위주의 체계를 갖추면, 건강의 사각지대가 넓어져 복지의 질을 장담할 수 없으며, 복지의 비용이 더 커질 수 있음.
- 2025년에는 우리사회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기에 이에 대한 대비가 시급함.
 - 65세 이상 고령자의 95.3%가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고 평균 4.1개의 복합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음.

- 복합만성질환을 가진 고령인구가 늘고 있기에, 일차의료영역에서 우선 노인주치의의 선제적으로 실행하여 사전 관리에 들어가야 함.
- 65세 이전에 만성질환 관리에 들어가지 않으면 이후 의료비는 급격하게 증가될 것임.
- 정신건강정책 강화
 - 청소년의 정신건강수준향상을 위하여 자살예방교육, 인터넷 중독 예방사업 등이 강화되어야 함.
 - 청소년에게도 담당 주치의제가 마련되어 정신건강에 대한 지원책이 필요함.
- 산업화에 따른 환경의 변화로 새로운 환경성질환 증가하므로 이에 대한 대비 필요
 - 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만성질환으로 인한 중증질환자가 증가하고 있음.
 - 새로운 환경성질환의 발생에 대한 조사, 정보제공의 필요성이 큼
- 주민들의 수요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예방중심의 건강관리체계로의 변화, 의료보험 보장성, 민간의료보험을 의료보험으로 통합일원화, 비영리법인의 요건 강화 및 정부 지원 강화 등이 필요함.
 - 건강의 위험 요소가 다양한 형태로 증가됨에도 공공, 민간의료분야에서의 대비는 부족함으로 공공, 민간의료분야에 시민들의 참여를 촉진하여 보건분야의 혁신을 가져와야 함.

2) 세부 지표 제안

- 건강수명 증가와 건강불평등의 감소, 건강 격차 완화: 불평등 완화에 건강 불평등 완화 항목으로 추가
 - 지역별 소득별 기대수명, 건강나이
 - 지역별 소득별 심혈관질환, 암, 당뇨병, 또는 만성호흡기 질환으로 사망할 확률, 사망률; 자살률
- 고령층에 예방중심 건강관리 및 만성질환위험요인관리를 위한 건강생활지원
 - 65세이상 노인에 사전 건강관리(주치의)서비스 시행 비율
- 아동 건강보호 및 건강증진 지표에 영아사망률, 5세이하 유아 사망률외 선천성기형아 발생률 추가
- 장애인은 지역에서 대표적인 취약그룹

- 장애인건강주치의 서비스 제공 비율, 장애치료보장의 범위 등 건강인 건강지표 필요.
- 예방중심 건강관리 및 만성질환위험요인관리를 위한 건강생활지원 지표
 - 지역별 (동단위) 돌봄-의료 연계(통합돌봄)센터의 설치비율
- 유해화학물질, 대기, 물, 토양오염으로 인한 사망 및 질병건수 감소 지표
 - 대기기준 미달성지역 거주인구율, 먹는물 수질기준 초과율, 화학물질의 유통량 및 배출량, 화학물질 사고 보고 등 환경보건지표(EHI) 활용 (국립환경과학원 보고서 참조)
- 국제지표에 맞춘 데이터 생성 필요
 - WHO 보건의료인력 분류 기준에 맞춘 보건의료 인력 수, 지역별 보건의료인력 인원수
 - 집 그리고 집 주변의 공기오염(미세먼지 포함)으로 인한 사망률, 안전하지 않은 물, 하수처리, 그리고 부족한 위생시설(안전하지 않은 ash서비스)로 인한 사망률, 의도하지 않은 중독(가습기 살균제 피해 포함)에 의한 사망률
 - 흡연율(성인 외 초등학생 흡연율 상승되고 있음에도 저 연령 흡연율 없음)
 - 적당한 가격으로 의약품 및 백신을 지속적으로 구할 수 있는 인구의 비율,
 - 의학연구 및 기초보건 분야에 대한 공적개발원조 총순투자

3) 통계 산출을 위한 제언

- SDGs의 건강지표의 경우 SDGs의 핵심원칙인 ‘누구도 소외되지 않게(No one left behind)’에 따라 모두의 건강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국가 전체의 통계 뿐 아니라 성별, 연령별 기초 단위의 통계 생성이 되어야 하나 국가통계포털에서는 기초단위별 통계가 부족하여 유의미한 진단결과 도출이 어려움.
- SDGs 지표 관련 통계데이터를 일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로 구현하는 등의 방안과 함께 지자체별로 수집해야 하는 지표들의 국가통계포털 차원의 통합관리, 제공이 되어야 함. (예, 법정전염병 환자 발생 및 사망자수 등)

4. 교육 분야

- 4.1. 목표를 2030년까지 “모든 아동이 **성별과 관계 없이** 적절하고 효과적인 학습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평등한 양질의 무상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의 이수를 보장한다” 로 수정.

▪ 4.3 목표를 “2030년까지 모든 학습자들이 성별에 관계 없이 적정 비용으로 가능한 양질의 기술교육, 직업교육 및 대학교육을 포함한 고등교육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보장한다.”로 수정.

▪ SDGs 4.7 목표 관련

➢ K-SDGs에서 4.7 목표를 ‘세계시민교육’을 중심으로 세부목표화 할 경우, 기존의 목표에 비해 협소해지는 측면이 있음. ‘세계시민교육’을 어떻게 해석하고 실천하느냐에 따라서 달리 판단될 여지가 있으나, 현재 제출된 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세계시민교육은, 국내 다문화 상황에서의 적응의 문제나 개발교육에만 그 초점이 있음. 국내적 맥락에서 인권, 성평등, 평화와 비폭력 확산 등, 4.7 목표가 담고 있는 가치들이 교육 전반에 주류화될 수 있도록 세부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 형식교육뿐만 아니라 비형식교육에 대한 고려도 포함되어야 함. 특히, 4.7 목표와 관련된 가치교육은 CSO 중심으로 진행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형식교육과 비형식교육 모두를 포함할 필요가 있음.

➢ 평생교육 관점에서 4.7 목표에 접근할 필요가 있음.

➢ 4.7 목표가 가치지향적인 교육이기 때문에 투입 대비 산출의 방식으로 성과를 측정하기가 어려움. 따라서 성과 측정 수단 및 지표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와 설계가 필요함. 따라서 세계시민교육 지표 수립 과정에서 민관학의 협업, 효과적인 거버넌스가 필요함.

▪ 전반적으로, 전체평균으로 성과를 확인하는 것이 아닌 소외계층의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별도의 지표 필요. 예를 들어, 세부목표 4.1의 지표 관련하여, <글로벌 지표로서 OECD PISA 및 IEA TIMSS에서 현재 측정하고 있는 한국의 아동/청소년의 성비>는 필요한 부분이나, 전체적인 평균으로 성과를 측정할 경우 소외계층의 상황 개선에 대한 부분은 측정하기 어려움.

▪ 현재 K-SDGs 작업반 일정이 촉박하여, 4.5, 4.7 목표를 포함하여 아직 충분히 작성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판단. 추후 보완이 필요함. 전반적인 초안 작성 일정이 촉박하여 의미있는 내용을 담아내는데 무리가 있음. 성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판단. 추후 보완이 필요해 보임.

▪ 10. (4-c) 교사교육 분야의 국제협력에 있어 개도국 교사역량 향상이라는 목표에 앞서 국내 예비/현 교사 교육에 역량강화에 대한 검토가 필수적임. 개도국 교사역량 강화가 시혜적 관계의 일방적 지원이 되지 않도록 수평적 국제개발협력의 설계와 준비가 요청됨.

5. 도시 분야

1) 총평

- 도시분야는 SDGs 모든 영역에 상호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목표에 국한하여 설명하기 어려우나, 본문에서는 '지속가능한 도시 및 주거지'에 대한 11번 목표와 관련하여 기술함.
- 11번 목표와 관련하여 1차 세부목표와 지표에는 11.1, 11.2, 11.3, 11.7, 11.c와 관련된 내용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는데, 이 영역은 현재 우리나라 도시문제와 직결된 부분으로 꼭 포함되어야 하며, 현재 이 수준으로는 입장을 내기 어려움.
 - 특히 미 작성된 4개 세부목표는 '11.1 적정가격의 주택과 공공서비스 접근 보장', '11.2 지속가능한 교통시스템 제공', '11.3 참여·통합·지속가능한 계획과 관리역량 강화', '11.7 공공 녹지공간에 대한 보편적 접근'은 현재 국내 도시문제와 직결된 부분으로 단순히 UN SDGs의 국내이행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목표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의 보완이 선행되어야 명확한 이해와 함께 도시분야에 대한 세부의견을 낼 수 있음.
- 문화 분야의 세부목표는 UN SDGs의 11번 목표 속에 문화 및 자원 유산 보존으로 포함되어 있으나, '문화' 키워드가 오직 11번 목표에 포함된 것과 지속가능발전에서 '문화'가 중요한 것을 고려하면 우리나라 특성을 고려해야 내용적 범위를 넓히는 것도 고려해야 함.
- 11.a의 '경제,사회,환경적 연계성 지원'은 '생태축 설정', '지속가능발전 도농지표 설정' 등 좋은 논의를 하고 있으나 현재 제시된 지표는 추가 또는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함.

2) 제안 세부목표 및 지표

- 11.1에 대한 의견
 - 주거와 관련한 우리나라의 주요 이슈는 크게, 1) 주거비용과 2) 주거의 질 두 가지로 구분.
 - 전체가구의 44.5%인 862만5천 가구가 주택을 소유하지 못한 무주택자이고, 장기 공공임대주택의 총 재고량은 전체 주택대비 5%정도로 재고량이 부족해, 대부분의 무주택자들이 민간임대시장에서 높은 주거비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
 - 주거세입자들의 임대차기간이 2년으로 짧은데, 세입자에게 계약을 갱신할 권리(계약갱신청구권)를 보장하지 않고 임대료 상승률도 규제하지 않아, 세입자의

점유안정성과 주거비 부담 문제가 심각하며, 이는 빈곤의 악순환 구조를 고착화.

- 또한,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는 그린벨트 해제, 공공택지 지원, 기금 출자 등 공공임대주택 등에 사용해야할 기금과 토지 등의 공적 자원을 지원하면서도, 초기임대료가 시세의 90~95%로 높은 임대료와 8년의 짧은 임대기간 후 분양할 수 있게 하는 등 공익적 목적이 거의 없는 대기업 특혜 사업.
- 세입자의 점유 안정성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하고 임대료의 인상률을 규제하는 임대차 안정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등이 시급히 필요.
- 한편, 국내에서 비닐하우스, 판잣집, 쪽방, 컨테이너, 고시원, 여관·여인숙, 비숙박용 다중이용업소(pc방, 사우나, 만화방, 다방 등) 등 비주택 거주민은 홈리스와 함께 한국사회의 대표적인 주거 취약계층.
- 비공식 주거 현황에 대한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의 경우, 표본이 2만 가구에 불과하고, 최근 늘어난 고시원이나 비닐하우스 같은 비공식 주거(비주택)는, 주택이 아니란 이유로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여, 결국 주거문제가 심각한 200만 명이 넘는 주거복지정책 대상을 정부가 누락하고 있는 상황.
- 실질적인 주거복지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우선 정부 통계부터 개선될 필요.

■ 11.4에 대한 의견

- UN SDGs에 문화에 관한 목표 및 지표는 11번 목표에 세부목표로 포함되어 있음. SDGs 자체에 문화에 대한 고려가 빈약한 것은 사실이나, 지속가능발전에는 환경, 경제, 사회 영역 속에 문화와의 관계가 깊숙히 내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단순히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을 보존하는 노력에 집중할 때, 실제 SDGs를 시민 스스로 이행하는 실천동력이 생활문화나 삶의 방식으로 나타나는 현실을 K-SDGs에 담지 못하는 한계에 직면함.
- 따라서 K-SDGs가 우리나라의 특징을 반영한 SDGs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문화 목표 속에 생활문화, 문화향유의 영역까지 포함시키는 것도 고려해야할 것임.
- 이는 별도 목표 또는 영역까지 확대되지 때문에 11번 목표 내에서 추가적인 조정 또는 세부목표의 조정도 고려해야 함.

■ 11.a에 대한 의견

- 추진방향은 '계획을 통한 도-농간 경제, 사회, 환경적 연계 강화'에 대한 부분은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대부분의 작성 초안에 동의함.

- 하지만 일부영역, '도시·군기본계획과 시·군 환경보전계획을 통합관리하여 수립한 지자체 수'에 대해서는, 도시군기본계획은 일반적으로 행정구역 범위 내에서 추진되어, 현행 법제도적으로 상호 협력에 대한 명확한 검토 또는 협의가 어려운 한계가 있음.
 - 과거에는 행정구역과 도시계획구역이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논의가 가능했지만, 계획구역과 행정구역이 일치하지 않은 영역에 대해 제대로 계획관리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려운 전례가 있음.
 - 또한 지표로 제시되어, 이 계획의 수립이 도농간 경제, 사회, 환경적 연계 강화를 모두 해결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움.
- 미 작성된 세부목표 및 지표에 대한 의견
 - 현재 K-SDGs와 관련하여 일정이 촉박한 관계로 관련 분야의 세부목표 및 지표가 준비되지 못하여 작성이 안된 것으로 판단되며, 추후 보완되어야 할 것임.
 - 또한 '11.c 지속가능한 건축을 위한 재정 및 기술 지원'은 도시개발과 ODA의 연계를 고려하여 일본이 최근 추진하는 'Spatial Planning Platform'과 같이 도시계획 및 공간계획과 관련하여 우리나라가 시행 중인 도시개발펀딩을 해당 지표에 포함할 수 있음.

6. 환경 분야

1) 총평

- 환경분야와 직접 연관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6, 7, 12, 13, 14, 15이나, 17개 목표 전체가 환경분야와 직간접 연관되어 있음. 본 입장문에서는 직접 연관된 6개 목표 중 5개 목표에 대한 「K-SDGs 작업반 목표 및 지표 초안」을 검토함.
- 검토결과, 가장 문제가 된 지점은 「K-SDGs 작업반 목표 및 지표 초안」의 접근이 우리나라 상황에 근거해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검토한 후, 그에 따라 시급성, 중요성 등을 점검하고 세부 목표와 지표를 수립했다기보다는 유엔이 제시하는 세부목표와 지표를 한국 상황에 적용하는 수준에 머물렀다는 점은 매우 큰 아쉬움이 남음.
- 더욱이 기본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는 '사전 예방의 원칙'이 6개 목표에서 거의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음. 이러한 결과, 지속불가능성을 야기했던 기존 사회시스템이 만든 폐단을 근본적으로 바로

잡기 위한 목표나 지표가 제시되지 못한 점은 대단히 실망스러운 결과임.

- Goal 6 달성을 위한 한국 상황의 특수성은 도시 면적 중 불투수면이 매우 높아 지하수위가 낮아지고 빗물의 활용이 미흡하다는 점과 4대강 사업으로 대표되는 불필요한 보와 댐, 하구둑으로 인해 건강한 하천생태계가 붕괴되고 있다는 점인데, 이를 개선하고 이와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세부목표나 지표가 제시되지 않음.
- Goal 7 달성을 위한 한국 상황의 특수성은 에너지 사용에 따른 외부성 영향이 에너지 가격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스템 구축이 어렵다는 점과 낮은 전기요금으로 비효율적 에너지 사용을 부추기고 있음에도, 이를 개선하기 위한 지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 Goal 13 달성을 위한 한국 상황의 특수성은 교통(수송)분야에서 교통분담률이 도로 중심으로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다는 점과 휘발유와 경유에 세금을 부과할 때 환경적 측면이 합리적으로 고려되지 못해서, 환경오염 유발 효과가 큰 경유가 휘발유보다 상대가격이 저렴하다는 측면, 화물차량에 제공되는 유가보조금 문제 등이 있으며, 발전원에 부과되는 세금이 지나치게 낮다는 것, 그리고 온실가스감축량을 할당할 때 산업부문의 수출경쟁력이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산업계의 감축몫이 지나치게 적다는 점인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세부 목표나 지표가 제시되지 않음.
- Goal 14와 15의 목표 달성과 관련해서는 세부목표나 지표를 비교적 잘 설정하였음. 다만 대규모 개발 압력으로부터 육상생태계나 해양생태계의 훼손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적 대응 수단이 미흡한 부분과 실제 세부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이 미흡한 부분은 이후 보완할 과제로 남아있음.

2) 제안 세부목표 및 지표

- <2018 HLPF 한국 시민사회보고서>에 작성된 세부 목표 및 지표를 반영할 것을 요청함.

7. 평화 분야

1) 총평

- 유엔이 채택한 12개 세부목표를 모두 국내 이행과제로 채택하고 세부목표와 용어에 대한 적극적 해석을 통해 현실부합성을 높이겠다는 판단은 긍정적인임. 또한 SDG 16번을 포함한 SDG

이행을 남북대화의 협력에도 효과적인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은 앞으로 한반도 평화 구축에 있어 SDG 의 효과적이고 구체적인 이행 의지를 보여준다고 해석할 수 있음.

- K-SDGs 제정 과정에서 제 3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및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이행 계획 간에 정합성을 높여 시너지 효과를 강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기함. 이는 SDG 16번을 한국 상황을 더 고려해 해석하겠다는 의지로 긍정적으로 평가함.

- 그러나 4월 20일 정부가 공개한 제3차 NAP 초안에는 성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 마련 등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고 있다는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방안 검토 수준에 머물고 있어 2기 NAP보다 인권적으로 퇴보되었다는 시민사회의 비판이 높음. 또한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는 강한 안보와 책임국방을 내세우며 군비경쟁에 주력하는 정책 제안으로 평화를 구축하고자 하는 변화된 남북관계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K-SDG 지표 수립과 이행 과정에 있어 정부주도의 정책에서 부재하거나 그 수준이 역행된 조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관찰하고 반영되어야 함.

- SDG 16번 목표를 SDGs 이행을 가능케 하는 수단(enablers) 혹은 다른 목표의 달성을 가속화하는 장치(accelerator)로 명명하기도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는 평화교육과 같이 다른 지표들과의 유기적 연계 속에 다루어져야 한다는 점은 유의미함. 그러나 SDG 16번에서 제시하는 ‘평화’는 모든 형태의 폭력을 예방, 근절, 축소하는데 방점을 두는 소극적인 평화로 해석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SDGs 지표를 설정하고 이행하는 과정에서 구조적, 문화적 폭력의 요소를 파악하고 이를 예방하고 평화를 구축하는 적극적인 평화가 더욱 논의되어야 함. 또한 지속적인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 한국사회에 만연한 안보 중심의 군사 문화와 고착화된 분단폭력을 인지하고 이를 넘어서는 평화문화 형성에 SDG 16번이 더욱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함.

2) 제안 세부목표 및 지표

- 16-1 에 더 추가되어야 할 세부 지표 제안

- 한국사회의 다양한 폭력의 구조적 원인에서 국가폭력(불법사찰, 집회 시위 등에서 발생하는 공권력 남용), 사회적 갈등, 젠더 인종 등 주요한 사회적 불평등에 의한 사망상해율 지표 추가
- 갈등예방 및 갈등조정 역량 등의 평화역량증진의 정도

▪ 16-2 에 더 추가되어야 할 세부 지표 제안

- 아동 군사훈련 및 유사 군사훈련, 아동에 대한 폭력과 전쟁 선호적 교육 등의 실시여부와 횟수
- 폭력 및 고문을 종식하고 평화문화를 증진할 수 있는 기관 및 프로그램(사회, 학교, 공동체 내) 설립 및 이행 여부

▪ 16-4 추가되어야 할 세부 지표 제안

- 군사 시설, 군수산업체 정보 공개 투명성 제도 지표 추가
- 국방예산 검증 절차의 시민사회 참여 메커니즘 설립 및 확장
- 합법적인 무기거래를 통해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불법 자금 및 무기거래의 의미를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 확장하여 지표를 이행해야 함. (한국에서 생산하고 수출하는 무기가 다른 국가에서 인권침해에 사용되고 있음. 예: 바레인 및 터키에 수출된 최루탄)

▪ 16-6 추가되어야 할 세부 지표 제안

- 경찰, 군대, 국가정보 기구 등 직간접 국가폭력과 관련된 국가기구의 정보 공개 가능성 및 그 정도가 어느 수준까지 가능하고 이를 투명한 제도로 개발하고 감시할 수 있는 시민사회단체의 참여를 상시 상설, 보장

▪ 16-7 추가되어야 할 세부 지표 제안

- 선거연령 조정으로 청소년 참정권의 보장 및 확대 필요.
- 얼마나 다양한 계층 및 대표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선거권을 행사하고 있는가를 점검할 수 있는 지표 설정 필요

▪ 16-8 추가되어야 할 세부 지표 제안

- 국제기구의 평화적 사회 건설에 방해/기여 요소에 대한 내용이 부제함. 국제기구가 갈등 야기적 국가 행위, 불법적 군사행위에 대한 어떤 권한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음.
- 발전권 및 평화권 보장 정도에 대한 지표 설정 필요

8. 거버넌스 분야

1) 총평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기본원칙으로, ‘사전 예방의 원칙’, ‘공동의 그러나 차별적인 책임의 원칙’, 그리고 ‘통합적 의사결정의 원칙’을 제시.
- ‘통합적 의사결정의 원칙’은 거버넌스, 즉 SDGs 이행을 위한 **정치행정구조**에 관한 이야기로, 파편화되고, 전문가 중심의, 하향식 의사결정 구조를 벗어나, **통합적이고, 포용적이며, 상향식 의사결정 구조로 개혁**할 것을 제시.
- 유엔 SDGs에서 거버넌스 관련 내용은 크게, ① 정부기관의 투명성 및 책임성, ② 참여 거버넌스 및 파트너십, ③ 이행수단 및 모니터링에 관한 제도적 기반 구축으로 분류 가능하며, 다음과 같이 세부목표가 구성.
 - ① **정부기관의 투명성 및 책임성** : 16.3(법치·정의), 16.5(부정부패), 16.6(효과·투명·책임제도)
 - ② **참여 거버넌스 및 파트너십** : 5.5(여성참여), 6.b(지역공동체의 물관리 참여), 11.3(시민참여 도시계획), 14.b(영세어민 참여), 16.7(포용적·대표적·참여적 거버넌스), 16.10(정보접근성), 17.16(다양한 이해관계자 파트너십 체계), 17.17(공공/공공-기업/공공-시민사회간 파트너십)
 - ③ **이행수단 및 모니터링** : 17.1(재원), 17.14(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일관성), 17.18(양질의 구별통계)
- 상기의 관점에서, 현재 정부의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초안은 SDG 1~17까지 파편화되어 있어, 국가 SDGs 이행을 위한 ‘거버넌스’ 구조를 종합적이고 통합적으로 파악하기 곤란.
- 심지어, 6.b, 11.3, 14.b는 아예 다루이지 않고 있으며, 17.1, 17.14, 17.16, 17.17, 17.18에 대해서는 국제개발협력 관점으로만 협소하게 접근되어, 국가차원의 재원마련, 지속가능발전 정책 및 제도 마련, 다양한 이해관계자 파트너십 체계 구축,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국가 SDGs 이행 점검을 위한 통계구축 관련 세부목표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는 한계 노출.
- 또한, 거버넌스 관련 제시된 세부목표들 중 5.5(여성참여)를 제외하고, 16.3(법치·정의), 16.5(부정부패), 16.6(효과·투명·책임제도), 16.7(포용적·대표적·참여적 거버넌스), 16.10(정보접근성), 17.16(다양한 이해관계자 파트너십 체계), 17.17(공공,공공-기업 및

시민사회간 파트너십), 17.1(재원), 17.14(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일관성), 17.18(양질의 구별통계)의 경우, 세부목표의 국내적 유의미성만 설명되었을 뿐, 세부목표 달성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지표가 부재하여, 구체적인 정책방향을 가능하기 곤란한 상황.

- 한편, 정부에서 우리나라 상황을 반영하여 추가로 제시한 ‘16.11 정보인권 보호 조치 수립 및 시행’은 21세기 정보통신기술 발달로 새롭게 인권 및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이슈를 적절히 반영한 것으로,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
- 성공적인 국가 SDGs 달성의 바로미터는, ① 정부기관의 투명성 및 책임성 거버넌스뿐만 아니라, ② 경제·사회·환경 주제분야의 통합적인 거버넌스, ③ 국제-국가-지방이 상호 보완적으로 연계되는 거버넌스, ④ 정부/의회/기업/시민사회 등 다양한 행위주체들간의 협력 거버넌스가 통합적으로 구축되느냐의 여부에 달려있음.
- 이에, 상기 관점을 중심으로, <국가 SDGs> 이행 거버넌스에 대한 목표를 별도로 두어, 거버넌스 혁신을 위한 종합적인 노력을 강화할 필요.

2) 제안 세부목표 및 지표

① 정부기관의 투명성 및 책임성 거버넌스

- 16.3 국제 및 국가수준에서 법치 증진 및 정의에의 평등한 접근 보장
 - 지난 12개월간 범죄신고율 및 검거율(성별, 연령, 장애, 인구집단별)
 - 구속수사 비율(성별, 연령, 장애, 소득별, 인구집단별)
 - 화이트칼라범죄율 및 기소율
- 16.5 모든 형태의 부정부패와 뇌물수수 근절
 - 지난 12개월 동안 공무원을 최소한 1회 이상 접촉하여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었거나, 공무원에 의해 뇌물을 요구 받았던 사람의 비율
 - 지난 12개월 동안 공무원을 최소한 1회 이상 접촉하여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었거나 공무원에 의해 뇌물을 요구받았던 기업인의 비율
 - 공무원 징계사항 중 청탁·뇌물관련 징계 분포
- 16.6 모든 차원에서 효과적이며 책임있고 투명한 제도 개발
 - 승인된 정부예산 대비 지출결산 현황
 - 최근 12개월 동안 공공서비스(민원처리 등)에 만족하는 인구 비율

- 16.7 모든 차원에서 대응적, 포용적, 참여적, 대표적인 의사결정을 보장
 - 공공기관(국가 및 지방정부, 의회, 사법기관)의 공무원 분포(성별, 연령, 장애, 인구집단별)
 - 정부위원회 위원 분포(성별, 연령, 장애, 직업, 인구집단별)
- 16.10 국내법 및 국제협정에 따라 정보에 대한 대중의 접근을 보장하고 기본적인 자유 보호
 - 행정정보 비공개율(부처별, 사유별)
- 5.5 정치·경제·공적 생활의 모든 의사결정 수준에서 여성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참여 및 리더십을 위한 평등한 기회 보장
 - 국회 및 지방의회 여성 의석비율
 - 공공기관, 기업, 연구기관, 언론, 비영리민간단체의 관리직 여성 비율

② 경제·사회·환경 주제분야의 통합적인 거버넌스

- 17.14 지속가능발전 관련 정책 일관성 강화
 - 국가 및 지방의 행정기관 및 입법기관의 경제·사회·환경·제도 정책의 총괄 조정 기구 설치 현황
 - 지속가능성 영향평가 제도 수립 현황

③ 국제-국가-지방이 상호 보완적으로 연계되는 거버넌스

- (신규) 지방분권 및 자치제도 강화
 - 지방세 비율

④ 정부/의회/기업/시민사회 등 다양한 행위주체들간의 협력 거버넌스

- 6.b 물과 위생 관리 지역 공동체 참여 지원 및 강화
 - 강 유역 및 도시하천별 물 관리 민관협치기구 설치 수
- 11.3 2030년까지 모든 국가에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화와 참여 지향적이고 통합적인 지속가능 인간 거주지 계획 및 관리 역량 강화
 - 도시계획위원회의 시민사회 위원 비율
 - 지방 지속가능발전 협치 기구 설치 및 운영 지자체 수
 - 지자체 총 예산 대비 주민참여예산 규모
 - 지방 지속가능성 평가 및 보고 체계 구축 지자체 수
- 17.16 지식, 기술, 자원 공유를 통하여 각 국가별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달성하도록 지속가능발전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 국가 및 지방차원에서 SDGs 이행 및 점검을 위한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체계 구축 현황
- 17.17 경험축적 및 전략공유를 통하여 효과적인 공공, 공공-기업 및 시민사회간 파트너십 권장 및 촉진
 - 연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비용 규모(SDGs 목표별, 분야별)
 - 정부-기업 파트너십 사업비 규모(목표별, 분야별)

⑤ 이행기반

- 17.1. 조세 및 기타 수익 징수 국내역량 개선을 위해 국내재원 동원 강화(개발도상국에 대한 국제지원 포함)
 - GDP 대비 정부 세수(세입) 총액 (자원별)
 - 국내 세금에 의해 자금이 지원되는 국내 예산의 비율
- 17.18 2020년까지 고품질의 시의성 있고 신뢰도 높은 데이터를 소득, 성, 인종, 민족, 이민, 이주상태, 장애상태, 지리적 위치, 기타 국가별 상황에 맞는 특성별로 세분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개발도상국의 역량 구축 지원
 - 통계 구축 및 모니터링 평가 예산이 포함된 정부사업 비율
 - 국가 및 지방 SDGs 지표에 대한 메타데이터 및 통계 시스템 구축한 공공기관 비율
 - 시민통계 반영 비율

9. 국제개발협력 분야

1) 총평

- 글로벌 파트너십에 관한 목표 17번은 SDGs의 효과적인 달성을 위한 이행수단으로써 전체 목표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수단임. 이는 개발도상국의 사회적·경제적 발전과 개혁을 가로막는 국제 경제 및 금융제도에 있어서 제도적인 장애요소들을 해결하는 것을 포함하며 민주적이고 공정한 국제 경제 거버넌스의 체제 개선을 포괄함. 그런데, 현재의 초안에서는 다양한 ‘개발협력’ 이해관계자간의 협력과 개발원조를 제공하는 국제개발협력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SDGs 전체를 포괄하는 차원의 파트너십이 아닌 국제개발협력에 한정된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조하고 있음.
- 17번에서 강조하는 정책과 제도의 일관성 측면에서 SDGs 국내 이행과 국제 이행을 기준으로

환경부와 외교부로 이분화된 우리나라의 SDGs 거버넌스 구조와 제도적 환경 개선을 위한 추진계획을 보다 명확하게 제시하고 포함할 것을 제안함. 또한, OECD DAC 동료 검토 보고서를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원조 분절화 및 정책수단간의 일관성(Policy Coherence for Development) 제고를 위한 관련 정책과 법제 마련을 제안함.

- 글로벌 파트너십에 있어서 개발재원 확충이 중요한 것은 분명하나, 현재의 초안에서는 양적 차원의 지원을 부각하고 있음. 개발 재원의 양적인 확충은 기본적으로 선행되어야 하지만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기본원칙으로 ‘사람’과 ‘인권’이 그 중심이 되어 먼저 강조되면서 질적인 측면도 동시에 강조되어야 함. 민간자금 동원 및 혁신적인 개발재원 마련과 동시에 인권에 기반한 개발의제들이 상정되고 이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시민사회는 관련 규제 제정 및 모니터링을 통해 인권에 기반한 접근 및 개발과정에서 소외되고 피해를 받는 취약계층의 권리를 보장해야 하며 이에 상응하는 내용이 ‘목표 설정 시 고려 사항’에 포함할 것을 제안함.
- 글로벌 파트너십을 이야기하면서 수혜를 받는 국가라는 의미의 수원국을 사용하고 있는데,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을 기준으로 “개발도상국” 및 “협력대상국”이라는 용어 사용 및 통일을 제안함.
- K-SDGs 수립에 있어서 참여 거버넌스 활용을 위한 시도는 좋으나, 전체 일정 및 협의가 촉박하게 진행된 점과 절대적인 시간 부족으로 인해 다양한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음. 이러한 의미 있는 시도를 시작으로 향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협의하고 의견을 모으는 과정을 통해 시민사회와의 소통 및 의견 수렴 과정이 개선되기를 희망함.

2) 제안 세부 목표 및 지표

- 17.2 개도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 규모 확대뿐 아니라, 무상원조 비율 확대가 시급한 바, 관련 지표 추가 제안. 2차 기본계획에서는 2017년까지 유무상원조비율을 현행 비율인 40:60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OECD DAC 회원국의 무상원조 지원 평균 비율이 90%에 달하는 것과 비교할 때 한국의 무상원조 비율은 상당히 낮은 편임.
 - 한국 공적개발원조의 유무상 원조 비율
- 17.9 개발도상국의 SDGs 이행 국가계획 지원을 위한 역량 및 국제사회 지원강화
 - 협력대상국에서 지속 가능한 국가발전전략을 수립, 추진 시 원조 예측성을 높일 수 있도록 협력대상국에 대한 한국의 중기 원조집행계획 수립 및 파트너국가와 공유 여부
 - 협력대상국 SDGs 달성을 위한 한국 국제개발협력 전략 구성 및 실행 여부

- 17.1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 일관성 강화
 - 유엔 이주노동자 협약에 가입 여부
 - 정책 비일관성을 해결하기 위해 무역을 위한 원조(Aid for Trade)에 참여하는 모든 관련 부처를 대상으로 범정부적인 논의의 장 구성 여부
- 17.17 시민사회와의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서는 큰 틀에서 민관 파트너십 전략이 먼저 수립된 후 이행 가이드라인이 수립되어야 함. 또한 이해관계자 협의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의 의견이 정책에 의미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환류 시스템 마련이 필요함. 2017 OECD DAC에서 권고한 것처럼 최소한 시민사회 파트너십 프레임워크 등 시민사회를 독립적인 개발협력의 주체로 인정하는 파트너십 전략 수립 및 정책협의 개최에서 한 발짝 나아가 모니터링 및 환류 시스템 마련을 제안함.
 - 정부와 시민사회 파트너십 프레임워크 수립
 - 이해관계자 협의회 개최 여부 및 협의회 결과 반영 여부
 - 시민사회를 통한 ODA 집행을 OECD DAC 평균 수준인 10% 수준으로의 확대
 - 한국의 시민사회와의 파트너십 강화뿐 아니라, 개발도상국 시민사회와의 협력 확대를 위한 지표 추가

❖ 부록

A. 입장문서 초안 작성자 명단

1. 서문: (사)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2. 경제 분야: 한국사회적경제연대
3. 건강 분야: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4. 교육 분야: 교육연대체 씨앗, 피스모모
5. 도시 분야: (사)한국도시연구소, (사)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6. 환경 분야: 녹색연합
7. 평화 분야: 피스모모
8. 거버넌스 분야: (사)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9. 국제개발협력 분야: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G)

B. NGO그룹 명단

2018.6.1 기준(가나다 순)

1.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2.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3. 교육연대체 씨앗
4. 녹색 미래
5. 녹색연합
6. (사)인재육성아카데미
7. (사)한국도시연구소
8. (사)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9. (사)환경정의
10. 아이쿱협동조합지원센터
11. 에코피스리더십센터
12. 자전거타기운동연합
13. 피스모모
14.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15.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16. 환경운동연합